

싸우는 산재노동자 사진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1988년, 15살 문송면
2024년, 23명 아리셀 노동자
원진레이온 직업병 노동자와
삼성 반도체 황유미

싸우는 산재 노동자가 바꾼 세계를 기억합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참가단체

-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속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화섬식품노조
- 노동건강연대
-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이주와인권연구소
- 일과건강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2024.6.2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경기도 화성 1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공장 배터리 폭발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로, 아리셀은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불법파견에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한 생산공정에 투입했다. 정주·이주노동자, 피해유족은 참사 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해왔다.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천여 명이 참여했다.

© 노동과세계 박한솔

8.17 아리셀 49재 현장추모제



© 노동과세계 백승호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한다면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한국 노동자보다 3.6배 높으며, 산재은폐율은 93.6%에 달한다. (국가인권위, 2024)

취업해야만 체류할 수 있었던 미등록 이주아동 故강태완



故강태완님은 다섯 살 때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에 온지 25년만에 체류자격을 갖게 되었다. 2024년 3월 전북 김제에 있는 HR E&I 전기특장차 회사에 취직하고 같은 해 11월 8일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와 이주인권·노동단체는 회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 이주와 인권 연구소

민주노총이 함께 대응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故쿠안님 중대재해 투쟁

2023년 7월 6일

충북 청주시 오송 파라곤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외벽 거푸집 작업 중 갱폼이 추락하며 25층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유가족은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사건 대응을 위임했고 투쟁으로 8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



동자 故쿠안 씨 중대재해 의에 대한 입장발표

수많은 젊음이 산업재해 앞에 멈춘다 1

꽃으로 남은 19세, 구의역의 교훈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열차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모군(97년생, 19세)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많은 시민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했고, 위험의 외주화와 지켜지지 않는 2인1조 근무가 사회문제화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닳은 꼴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수많은 젊음이 산업재해 앞에 멈춘다 2

'다시는 이런 죽음 없게' 대책위·유족,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21년 4월 22일, 학비마련을 위해 평택항에서 일하던 대학생 고이선호님은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투쟁을 통해 항만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항만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매년 240여명이 항만 산재사고를 당한다.



©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대책위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을 먹을 수 있는가.

2022년 10월 15일,

SPC그룹 계열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 여성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동료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지만 사고 기계만 천으로 가린 채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연이은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파리바게뜨와 SPC그룹 불매가 확산됐다.

© 화섬식품노조

수많은 젊음이 산업재해 앞에 멈춘다 3

2014년 1월 충북 진천 제일제당에서 현장실습 중이었던 김동준이 떠났다.
2016년 5월 성남 토다이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 후 취업 중이던 김동균이 떠났다.
2017년 1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수연이 떠났다.

2017년 11월 19일

제주 구좌읍 한동리의 음료공장에서 또 한명의 현장실습생이 떠났다.
이민호, 민호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민호의 부모 역시 다른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한번 만져보게



© 민주노총제주본부,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현장실습노동자, 다음, 소희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 앞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홍수연님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홍수연 님은 숙련자도 기피한다는 통신사 콜센터 해지방어부서에서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을 견뎌야 했다.

© 민주노총전북본부

그리고, 김용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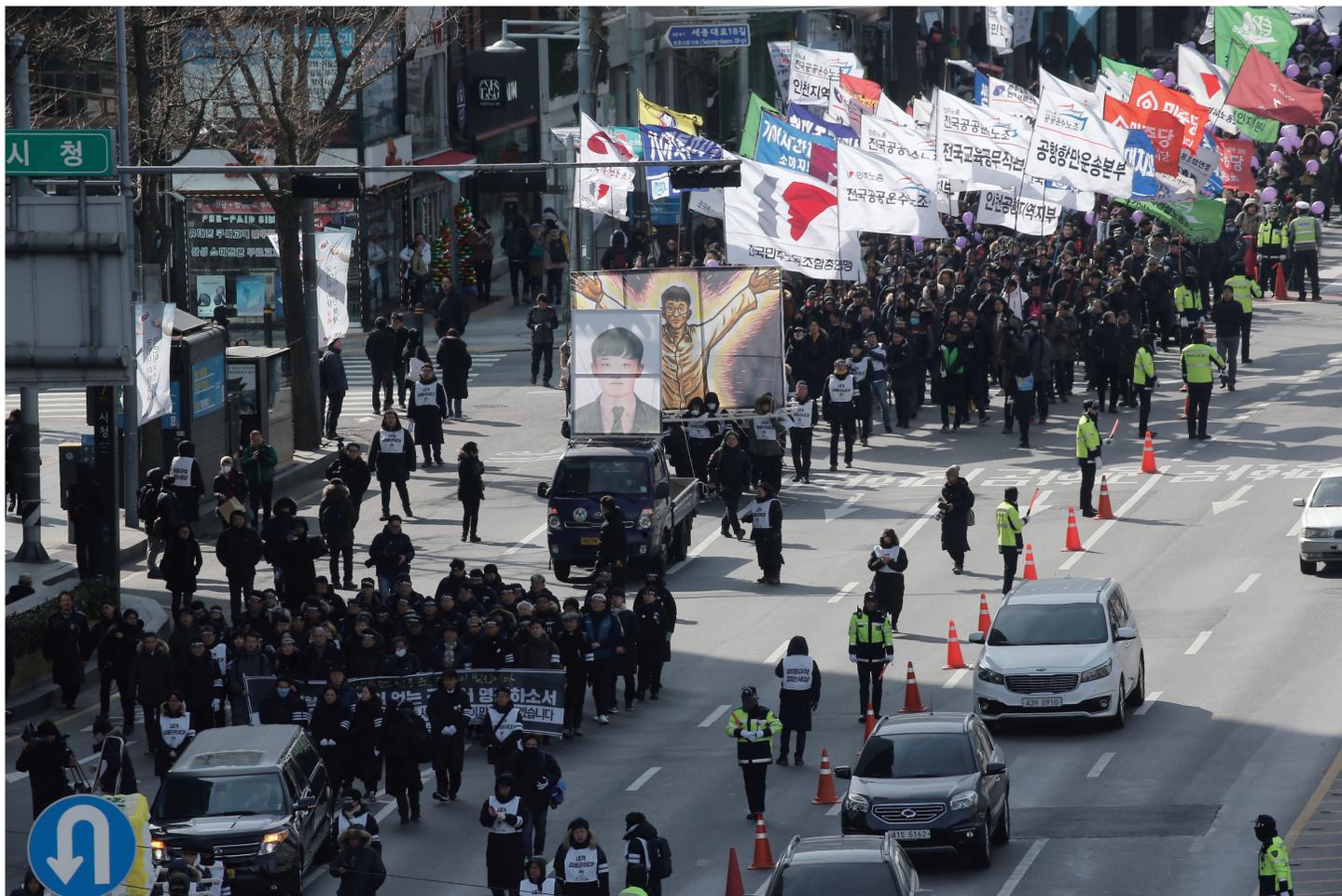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청년의 죽음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직업 환경속 24세 청년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발했다. 이 사고는 작업현장의 중대재해에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故김용균님 죽음 이후 처음 자취방을 찾은 부모님



© 공공운수노조



계속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 1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설 일용직 하청노동자에게

2023년 8월 11일 부산 DL이앤씨 현장에서 일하던 故강보경님이 추락해 숨졌다.
부산의 유족들이 올라와 시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DL본사 앞에서 故강보경님 어머니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끌어안았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위험하기에 금지된 동시작업을 강행하면서 유증기 발생-용접 불티로 발생한 화재참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 건설산업연맹

476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2024년 12월 7일 울산,

현대중공업 골리앗 8호기 정비 작업 중 전기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노동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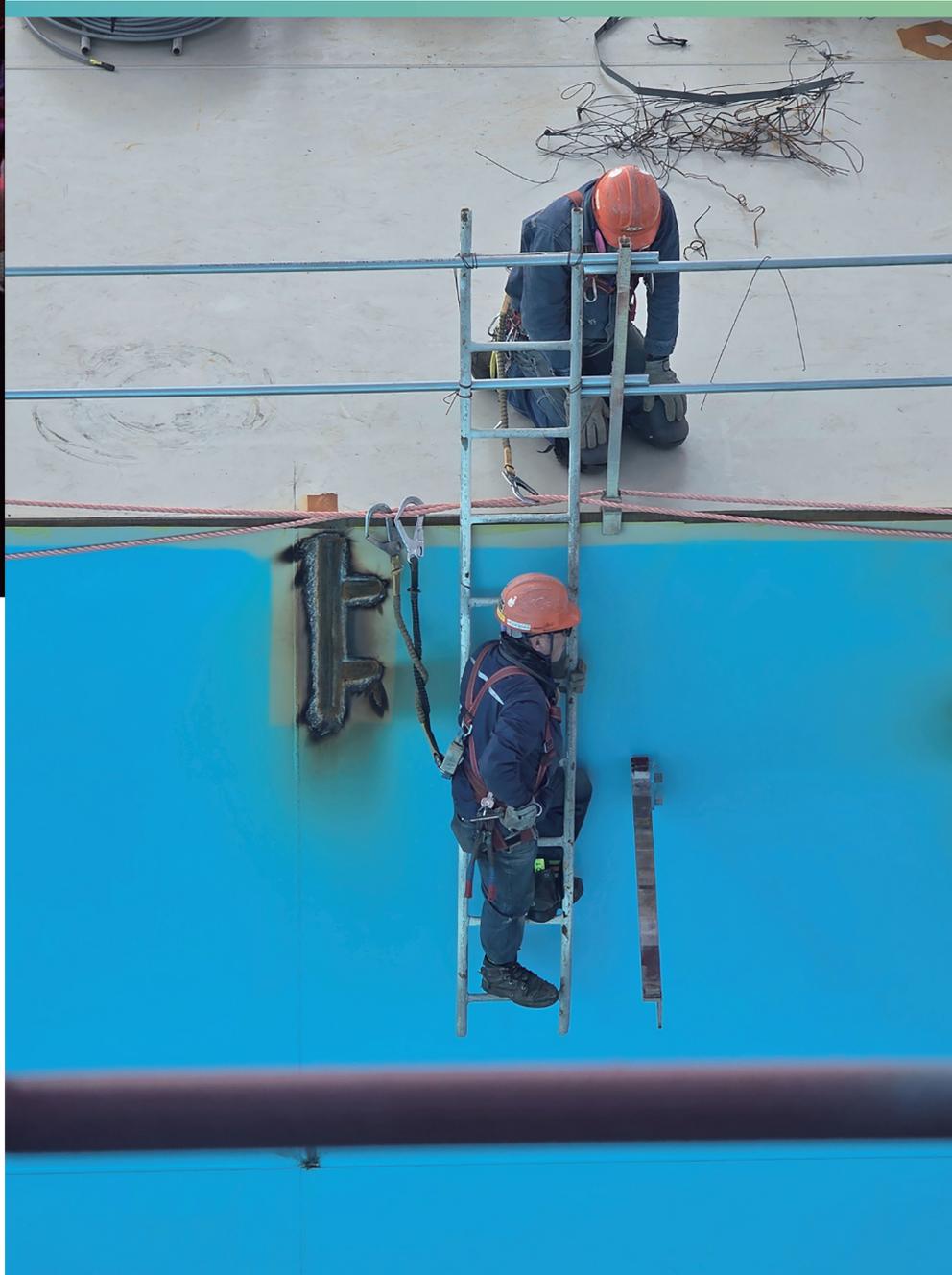
진수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심한 공정 압박을 받으며 안전 절차가 무시된 채 작업에 투입되었다.



© 금속노조

발판 설치 노동자가 배 외판에 위험하게 매달려 작업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 현장노동자가 제보했다.

(고소차)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만 안전보다 공정을 생각하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노동자는 위험으로 내몰린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1

여천NCC 불기소, 중대재해 면죄부 준 검찰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사고 발생,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7명은 하청노동자였다. 검찰은 1천여건 산안법 위반과 노동부 기소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여천NCC를 결국 불기소했다.



© 화섬식품노조

화성 화일약품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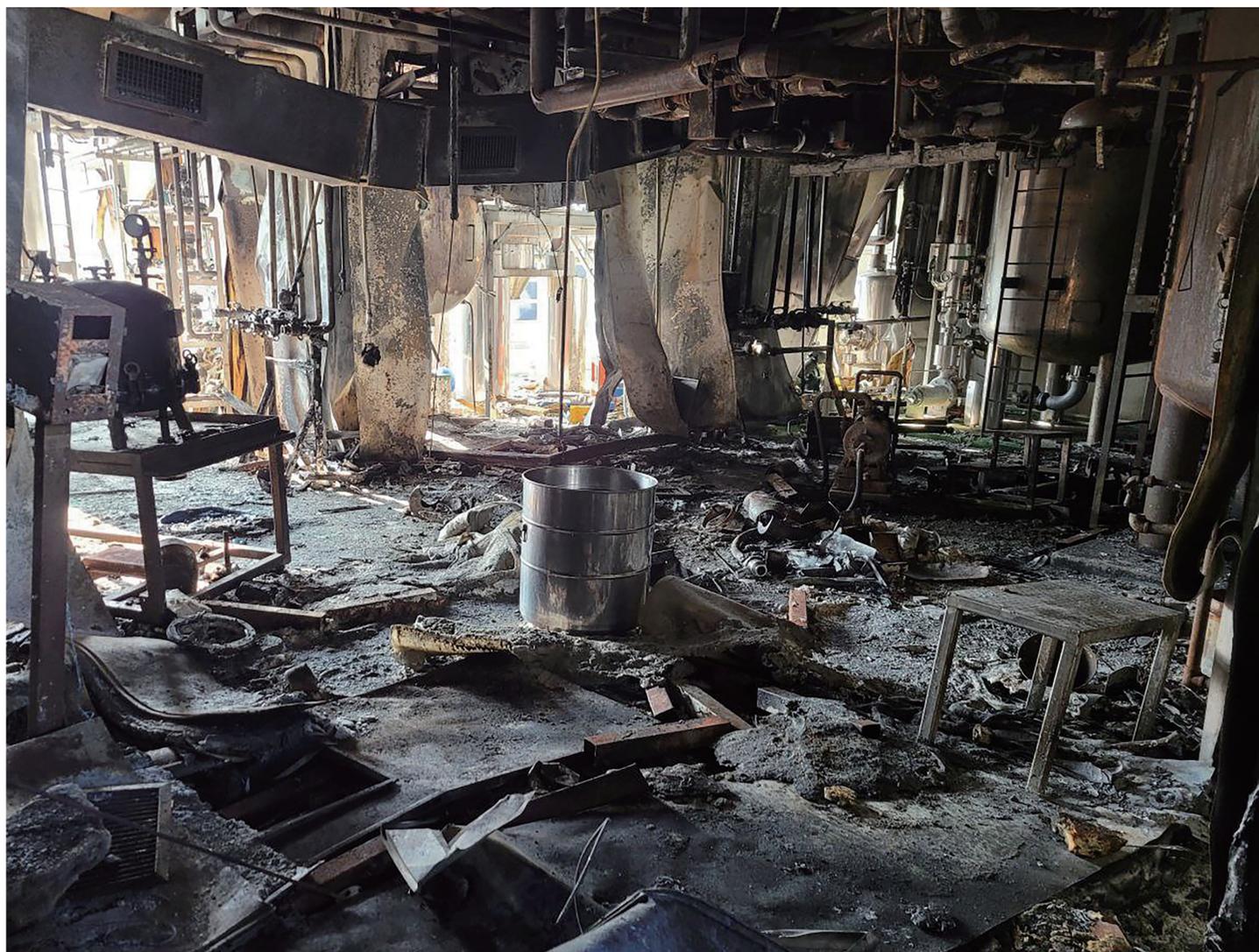
2022년 9월 30일

경기도 화성 제약공단 화일약품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화일 pharm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 후 2024년 9월, 2주기를 앞두고서야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다.

©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산재사망한 세아베스틸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작업중지명령과 근로감독을 회피하며 봐주기에 급급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도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으며 투쟁했다. 그러나 2024년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틀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재해 사고 <삼표산업>



2022년 1월 27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로 회장을 기소한 첫 사례다.

© 노동과세계 김준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2020년 5월 22일,
광주 폐목재 처리업체인 조선우드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故김재순님.
중증 지적장애인, 청년 노동자였던 그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아버지 김선양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에도 함께했다. 이 법은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총 866건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74건만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2024년 1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막기 위해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다행히 적용유예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6개월 후 50인 미만 사업장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났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1

동료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투쟁!

2021년 5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회사 요구에 따라 하차 작업 중 300kg에 달하는 폐지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본부는 이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재발 방지 대책(폐지더미에 밴딩, 경사로 폐쇄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 공공운수노조

거리의 죽음, 배달노동자



| 서비스연맹 선릉역 추모

2021년 8월 26일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그의 오토바이가 놓인 선릉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건당 수수료에 의지해 속도 전쟁 치르듯 일하는 라이더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달료 인상이 필요하다.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행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과로사 투쟁

택배 노동자 과로사 행렬을 멈추자

코로나 시기 택배 물량이 폭증했다. 2020년~2022년까지 2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2021년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이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주축이 되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를 결성하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여냈다.



© 서비스연맹

과로에 쓰러진 동료들을 잊지 않습니다!



2017년 한 해에만 10명이 넘는
집배원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동료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노사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
기획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아직 기획추진단 결과가 100%
이행된 것은 아니다.

© 공공운수노조

기억해야 할 투쟁 1

한국 산재추방운동의 상징 15세 문송면

1973년 충남 서산 출생. 집안사정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로 상경한 15세 문송면. 1987년 12월에 들어간 사업장은 영등포의 협성계공이라는 압력계, 온도계 제조업체였다. 문송면은 “1988년 7월 2일” 급성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 일과건강

각계각층이 참여한 문송면 장례위원회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산재추방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태동한 노동안전보건운동으로 평가된다.



기억해야 할 투쟁 2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레이온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황화탄소'는 원진레이온 직업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면 질병 양상이 '중풍과' 비슷해서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중풍' 증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 직업병으로 인정된 수만 943명이고, 사망한 노동자는 229명에 달한다.



© 일과건강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1991년 김봉환 열사 사망 이후 137일간 투쟁을 벌였다.

1992년 직업병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직업병 판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법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최초의 조직적 직업병 인정투쟁이다.

1991년 5월 1일 연세대 도서관 앞 '원진레이온 직업병살인 및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



직업병투쟁 1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를 알려낸 반올림

구미의 삼성 하청기업 “케이엠텍”에서 갤럭시 폰을 제조하던 21살 청년노동자가 백혈병이 발병했다.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지 2년만이다. 회사는 부모 탓을 하며 유해물질 취급, 산재 발생 책임을 회피하고 해고까지 했다가 연대의 힘으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약속을 받아냈다.



“3월 6일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님(23세, 2007년 사망)의 추모기일이다. 황유미님 산재인정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유해화학물질에 병들고 죽어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통과 마주했다. 올해 황유미 18주기 기일에 방진복을 입고 114명의 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 피켓을 들고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며 행진했다.”

© 비주류사진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한다



© 허란

직업병투쟁 2

누가 이들을 직업병에 걸리게 하는가



파견노동이 실명하게 했다.

© 노동건강연대

2015년 말 ~ 2016년 초, 부천·인천 공단 스마트폰 부품공장에서 20대 청년 6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 인터넷에서 '공장알바'를 검색해서 잡은 일자리가 불법파견인 것을, 부품을 찍어내고 세척하는 메탄올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청년노동자들은 몰랐다. 2018년 1월, 바다를 볼 순 없지만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 강릉 바다 여행을 다녀왔다.



무상급식을 위해 헌신한
급식노동자를
국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 경향신문

2017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환기장치 고장으로 급식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전국 학교급식실에서 폐암 산업재해가 속출했다. 폐암 산재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에게는 아이들을 위해 급식을 만드는 일이 평생 자부심이었다. 작년까지 폐암 산재 104건 발생, 24년 7월 기준 폐암 산재신청 건수는 169건이다.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는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2년간 임업 중대재해 9건이 발생할 정도로 임업 현장 산재와 중대재해 비중이 높다. 쪼개기 사업 발주로 영세 업체에서 일용 노동자들이 고립된 노동을 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년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북부지방산림청을 '2023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언론보도로 이어지며 도의회, 지역산림청이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 민주노총 강원본부

불을 진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대부분 지방산림청 공무원으로 위험수당도 없는 차별적 처우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는 위험수당 4만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영남권 산불에서 산불진화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방송노동자 산재 투쟁

2016년 10월 26일 드라마 <훈술남녀> 이한빛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투쟁을 통해 이듬해 6월 CJ ENM은 유족과 대책위 측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한빛의 죽음이 개인의 부적응 문제가 아니라 방송 노동 실태의 열악함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창립되고, 방송업에서도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는 계기가 된다.



2017년 5월 1일, 이한빛 PD를 추모하는 청년유니온 조합원들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2020년 2월, CJB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14년을 일한 이재학PD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당하여 법정 투쟁에 나섰다. 1심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싸움에 나섰다, 방송사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폭염에 쓰러진 코스트코 마트 노동자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관리직으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김동호님이 근무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하남시 낮 기온은 35도에 육박하여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고인은 찌는듯한 주차장 안에서
며칠째 하루 3~4만보씩 걸으며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했다.



© 서비스연맹

정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2023년 10월 5일 강원도 정선

적재용량의 두 배에 달하는 석회석을 싣고 운행한 16톤 화물차가 정선군 주정차단속원 초소를 들이받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초소는 가건물이었고 안전바도 없었다. 급경사 내리막도로에는 방지턱도, 단속카메라도 없었다.

이 사건은 민주연합노조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고 지자체 가건물 전수조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민주일반연맹

